

미래인문학 인문역량지수
논술형 측정문항
(유럽지역학 영역)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미래인문학 코어사업단

2018년 11월 5일 version 1.0

[질문]

[지문-1]~[지문-4] 그리고 [자료-1]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사례에서 나타난 '다양성과 통일성의 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치 및 소통 방식을 설정하고, [자료-2]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어떤 함의를 줄 수 있는지를 제시하시오.

[답안 분량]

3,000자 이상 4,000자 이하

[지문-1]

유럽통합은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 조화와 협력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유럽 내부적으로 완전고용, 진보, 사회정의, 인권 등의 대의를 천명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평화, 연대, 상호존중, 자유무역, 빈곤완화, 인간존엄 등을 지지하고 있다. 그 간의 유럽통합 성과는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관련 당사자들 간의 협력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통합 과정은 많은 갈등관계를 형성해왔으며 이는 분야와 범위를 달리하면서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있다. 통합과정에서 협력이 긍정적 측면이라면 갈등은 부정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부회원국의 재정위기 상황과 그에 대한 대처는 적지 않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통합의 후퇴를 전망하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과연 유럽인들이 진전된 지역주의의 모범을 보여줄 것인지 그 여부가 궁금하다.

[지문-2]

유럽연합의 역사는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은 했지만 그 근저에는 유럽이 하나의 문화공동체라는 기본적인 시각이 깔려있다. 즉 유럽연합은 공통된 경험과 기억과 전통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유럽시민이라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것을 고정된 불변의 실체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151조에 명시된 “EU는 공동의 문화 유산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가적 혹은 지역적 다양성을 존중하여 회원국의 다양한 문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EU가 결코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문화를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에서 주된 내용을 이루는 것은 세계화나 정치적 화합에서 기인하는 정체성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다. 문화적 다양성이니 문화적 예외니 하는 주장들은 바로 이러한 정체성의 상실을 막고자 하는 의도에서 야기된 것이다. 그것은 물론 미국의 문화적 패권주의를 경계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 유럽연합 내부에 공존하는 모든 문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 결국 문화적인 차원에서 유럽통합은 하나의 단일한 정체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운데 상호 이해와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이와 같은 상호 이해와 소통은 유럽시민이라는 소속감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EU가 최대의 다양한 목소리를 문화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의 문화적 정체성이란 미리 주어지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생성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의 문화적 정체성이 어떤 모습으로 생성될 것인지, 단절된 조각들이 나열된 모자이크에 불과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조각들이 긴밀한 조화 속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의 입방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지는 다양한 집단들 사이의 대화와 소통 및 이해에 달려 있다. 다양한 목소리를 규합하려는 EU의 노력,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모습에 주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문-3]

2010년 5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으로부터 시작된 유럽경제의 위기는 재정위기인 동시에 유럽 단일통화체제의 위기이다. 단일통화체제의 태생적 한계가 재정위기의 핵심적 원인이고 재정위기의 전개가 단일통화체제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년여 동안 위기에 대응한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만을 내고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위기 해결이 어려운 이유로는 위기의 복합적 성격, 단일통화체제의 제도적 결함과 정치적 한계를 꼽을 수 있는데 그동안의 해결책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12년 6월 이후 제시된 일련의 정책은 유럽 단일통화체제를 공고히 하고 재정위기의 해결을 위해 옳은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였으며, 은행감독이나 재정에서 국가주권을 공동체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이 본격적으로 최종대부자 역할을 하면서 위기의 심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시작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 변화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아직 그 기반이 취약한 정치적 내지 정책적 합의를 깨뜨리지 않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재정취약국은 구조조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며, 은행감독 권한이나 재정에 관한 권한 등 공동체 이양에 관해 전향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야만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진지하게 재정통합을 위한 발걸음을 옮겨 나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정치적 합의 도출이 관건이므로 앞으로도 궤도난마식의 위기 해결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단일통화체제의 붕괴가 불러일으킬 혼란과 비용이 너무나 크고, 유럽의 정책담당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체제붕괴라는 극단적 상황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합의가 이어질 것이다.

[지문-4]

2017년 12월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양자회담을 했다.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오르반 총리는 “유럽은 기독교적 가치를 보호함으로써 더욱 강해질 것이며, 2018년은 유럽의 다문화 가치에 대항하는 대단한 해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유럽연합에 대한 도전을 시사했다. 가디언은 “유럽연합을 위협하는 문제는 유로존 개혁, 인종주의 확산, 러시아가 아닌 유럽 내부에 있다”며 동유럽에 주목했다. 공통된 역사와 문화 강조를 통해 진정한 공동체로 완성되는 듯했던 유럽연합은 이와 같이 예상과는 다르게 매우 위태로운 모습이다.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를 선언했고, 동유럽 국가들이 서유럽 중심의 유럽연합에 반기를 들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폴란드는 국가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유럽연합이 도입한 난민 할당제를 거부했으며, 이웃 국가인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를 규합해 반 유럽연합 전선, 즉 비셰그라드그룹(Visegrad Group)을 결성해 상호 협력해 왔다. 이들이 유럽연합에 반기를 든 배경엔 유럽의 가치를 둘러싼 이견이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서유럽이 진보주의를 유럽의 대표 가치라 여기는 것과 다르게 민족주의와 보수기독교적 관점에서 그 가치를 찾는다. 그것은 역사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서유럽 열강들의 침략으로 인한 희생자였다는 피해의식이 동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고유의 가치로 삼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보수기독교적 가치 주장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는데, 무슬림에 대한 증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난민 할당제 거부는 과거 서유럽 국가들이 침탈을 일삼을 때 자신들은 오스만 제국을 막아내야 했던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발견되는 차이의 문제도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서유럽 국가가 경험한 사회민주주의 단계 없이 신자유주의를 접하게 되어 평등, 연대 등의 가치를 체득하지 못하며, 그 결과 서유럽보다 가난하고, 낙후됐으며, 유능하지 않다는 콤플렉스를 가졌다는 것이 그것이다. 서유럽에 대한 동유럽의 불만은 공산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서도 나타난다. 독일과 헝가리에서 판매되는 누텔라는 같은 제품이 아니다. 독일에서 파는 누텔라의 코코아 성분 함량이 8.5%인데 반해 헝가리에서 파는 것은 7.4%다. 밀크파우더 함량도 각각 7.5%, 6.6%로 다르다. 문제가 되는 제품은 이것만이 아니다. 2016년 7월 로버트 피코 슬로바키아 총리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개한 제품들은 독일 제품 제이콥의 커피믹스, 영국의 냉동식품 이글로의 피쉬 스틱, P&G의 레노 섬유유연제였다. 서유럽 기업이 질 낮은 제품을 떠넘겨 동유럽의 소비자는 2등 소비자로 전락했다는 인식이다. 동유럽에서 확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CNN은 서유럽의 영향을 줄이고, 혈통·역사·영토를 공유하는 민족국가 간의 느슨한 동맹체로서의 유럽연합을 원하는 동유럽 국가의 저항이 유럽연합의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난민정책을 둘러싸고 시작된 동·서 유럽 가치의 충돌이 새로운 분열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자료-1] 논문: 이문화(다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개념에 대한 고찰

오늘날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가 빈번해지고 다양화되었다. 이런 국제적 환경에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이런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의사소통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문화간 의사소통능력이다. 이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이문화적 이질성에 대한 지식이고, 둘째, 문화의 표현이 의사소통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문화 공동체의 의사소통 방식이며, 셋째, 의사소통 행위를 하는 이문화행위자에게 전제되어야 할 것은 관계적 상호작용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이문화간 의사소통에서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하지 못한 경우는 이러한 지식능력, 표현 또는 지각 능력, 관계능력이라는 세 차원에서 그 능력의 부재 또는 부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이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돕고, 각 상호작용 상황에서 목표에 걸맞은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기 위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자질 또는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이문화간 의사소통에서 충분조건이기보다는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자료-2] 전 일본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 이사장의 <한겨레>와의 인터뷰

“최근 들어 아시아의 성장이 세계 전체를 견인하는 힘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라도 아시아는 지금보다 더 협력적이 되어야 한다. 지금 아시아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갈래다. 첫째는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고 군사력을 강화해 가는 길이다. 또 하나는 서로가 차이를 극복하고 협력하면서 군사적 위협 수준을 낮추고, 경제·사회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가운데 후자를 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자는 주장은 하나의 꿈이긴 하지만 유럽연합의 예에서 보듯 결코 불가능한 꿈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중 사이에 긴장이 높아져 있고, 일-한 사이에도 아쉽게도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다. 일-중 관계에선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야스쿠니신사 문제가 장애가 되고 있다. 일-한 사이엔 야스쿠니 문제, 다케시마(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등의 문제가 있다.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선 여러 분야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쉬운 것은 경제다. 일·중·한의 경제는 어떤 의미에서 보완적이고 분업적인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안전보장의 공동체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동아시아 지역 전체가 ‘부전(不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